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Killing Paper 모의고사 1회 해설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바른 정답

1	2	3	4	5
⑤	④	⑤	⑤	③
6	7	8	9	10
④	③	②	③	③
11	12	13	14	15
④	⑤	⑤	④	⑤
16	17	18	19	20
②	①	⑤	①	②

1. 이론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의 개념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가치 중립성은 객관성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가)는 이론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 (다)는 기술 윤리학이다.

[선지 분석] ① 이론 윤리학은 도덕 이론을 정립할 때 메타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다. 메타 윤리학에서는 여러 도덕 논증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론 윤리학은 자신의 도덕 이론을 정립할 때, 메타 윤리학에 의해 이루어진 논리적 타당성 검토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메타 윤리학에서는 ‘허용 가능한’, ‘의무적인’ 등 도덕 이론에 사용되는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③ 기술 윤리학에서는 각 사회의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한다.

④ **메타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규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므로**, 이론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메타 윤리학의 주된 과제 중 하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론 윤리학(규범 윤리학)이 당면하게 전제하고 있는 바가 참인지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 철학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만약 철학자가 도덕규범의 체계를 세우고 이러한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도덕규범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또 자신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바꾸어 말해 그는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따라서 이러한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판단에서 ‘안다’, ‘참인’, ‘타당한’, ‘정당화될 수 있는’과 같은 단어가 규범 윤리학에서도 사용되지만, 분명하고 주의 깊게 분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

이를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메타 윤리학은 20세기 중반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서, 고대부터 시작된 이론 윤리학(규범 윤리학)에 역사적으로 후행한다.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력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당시 윤리학은 도덕 판단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일 뿐이므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 (후략).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번 문항 -

⑤ 이론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 모두 객관적인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기술 윤리학이 객관적인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연구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론 윤리학에서 정립하고자 하는 도덕 이론은 그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을: 너는 윤리학이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

- 이론 윤리학,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문항 -

2. 공자와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노자는 ‘백성의 이익 증진’도 싫어할까? 이익은 다 인위적인 것이니까? No!

[정답] ④

[계시문 분석] 깊은 유교 사상이 공자, 이른 도가 사상이 노자이다.

[선지 분석] ① 공자와 노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자와 노자는 모두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후천적 수양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자와 노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양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 공자는 옳고 그름을 엄격히 구별하며 예법에 따르는 수양을 강조하였지만, 노자는 옳고 그름의 분별을 지양하며 인위적 요소를 덜어내는 수양을 강조하였다.

② 공자는 부정, 노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자는 춘추 시대의 사회 혼란이 인간이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서,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에 따르면 도덕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인(仁)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자가 강조한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이다. 따라서 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법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반해, 노자는 춘추 시대의 사회 혼란은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저버리고 인위적인 규범에 얽매인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노자에 따르면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예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법을 멀리하고 자연적 본성에 순응해야 한다.

③ 공자와 노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공자가 강조하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의 개념이다. 노자 역시 통치자가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의 이익을 증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노자는 통치자가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인위적 강제가 없는 다스림으로써 백성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다. 노자는 백성의 삶이 매우 평안하여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성스러움을 잃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백배로 될 것이다. 인(仁)을 잃고 의(義)를 버리면, 백성은 자애[慈]와 효(孝)로 돌아오리라. 교활한 지혜를 잃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없게 되리라. 이 세 가지 말은 분별적인 것이어서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명령하여 귀의하게 한다. 소박함을 지향하고 질박함을 보존하며 사사로움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인다.

- 노자,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60p 4번 문항 -

④ 공자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별하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반면 노자는 이러한 인위적 구별을 모두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공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공자가 강조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개념인데, 수기(修己)가 치인(治人)보다 앞에 있다는 데서 공자가 통치자의 자기 수양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순서상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엘리아데의 종교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기출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답] ⑤

[계시문 분석] 가상 편지의 저자는 엘리아데이다.

[선지 분석] ①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이 자연물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연물은 눈에 보인다.

②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와 신화를 무의식 속에 은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비종교인임을 공공연히 자처하는 사람이다.

엘리아데는 공공연히 비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조차 그 존재의 근원에는 종교적 지향을 지닌 행위를 보존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스스로를 비종교적이라고 주장하는 현대인들에게 종교와 신화는 그들의 무의식의 어둠 속에 은폐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종교인이라고 칭하는 인간도 내면 깊이 생의 종교적 비전을 회복할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2023학년도 EBS 수능완성 93p 자료와 친해지기 -

③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운 공간과 그 외 공간 사이의 대립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먼저, **엘리아데에 따르면 성스러운 공간이 주위 공간과 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④ 성스러운 공간은 주위 공간과 질적으로 동일하다. (엘리아데 X)

-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155p 6번 문항 -

성스러운 공간은 성스럽지만, 속된 공간은 그렇지 않다. 종교적 인간은 이 두 공간 사이의 대립을 경험함으로써 이 두 공간 사이의 비균질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엘리아데의 설명이다.

종교적 인간에게는 공간이 균질하지 않다. 종교적 인간은 공간 내부의 단절과 균열을 경험한다. 공간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과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신성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출애굽기, 35) 하고 하느님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거기에는 어떤 성스럽지 않은, 따라서 일정한 구조와 일관성이 없는 무형태의 공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공간 - 즉 그것만이 실제적이고 현실로 존재하는 공간 - 과 그밖의 다른 공간,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무형태적인 넓은 공간 사이의 대립을 경험함으로써 이 공간의 비균질성을 알아내는 것이다.

- 엘리아데, 『성(聖)과 속(俗)』 -

④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이란 세속의 세계에서 성형을 체험하고 그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다.

⑤ 엘리아데에 따르면 세계는 혼돈이 아니다.

종교적 인간에게 세계는 성스러운 것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실존하고, 실제로 거기에 있다. 세계는 카오스, 즉 혼돈이 아니다. 따라서 세계는 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로 자신을 드러낸다. 하늘은 직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무한한 거리, 신의 초월성을 제시한다. 대지도 우주적인 어머니이자 양육자로서 자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종교적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연은 항상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다. 성스러운 돌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것이 신성하기 때문이지, 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돌의 진정한 본질을 계시하는 것은 돌의 존재 양식 안에 나타난 신성성이다.

- 엘리아데, 2022학년도 EBS 수능완성 131p 17번 문항 -

4. 벤담의 공리주의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기초적 수준의 양심(良心)과 도덕적 사고력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초등학교 도덕(혹은 바른 생활) 과목 시험 문제로나 적합할 정도로 쉽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등장인물은 J와 S로 둘이지만, S가 아니라 J에게 할 조언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이 상황에서 윤리적 조언을 받아야 할 사람은 S가 아니라 J임이 분명하다! 얼마 전 실제로 어떤 고위 공직 후보자 J가 과거 비슷한 행동(사악한 목적의 무의미한 소송 제기)을 하였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에게도 비슷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공리주의 사상이 벤담이다.

[선지 분석] ① 기초적 양심조차 결여한 사람이 제시할 조언이다.

② 기초적 수준의 양심조차 결여한 사람이 제시할 조언이다.

③ 기초적 수준의 양심조차 결여한 사람이 제시할 조언이다.

④ 기초적 수준의 양심조차 결여한 사람이 제시할 조언이다.

⑤ 공리주의에서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다. **사실 공리주의까지 갈 것도 없이 기초적 수준의 양심과 도덕적 사고력만 갖추고 있어도** J에게 비슷한 조언을 할 것이다.

5. 베블런의 소비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기초 개념들로만 구성된 무난한 문항.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베블런이다.

[선지 분석] ㄱ. 베블런은 하위 계급이 경제적 부의 획득을 통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한다고 보았다.

ㄴ. 베블런은 상위 계급이 경쟁적 비교 성향을 바탕으로 과시 소비를 한다고 보았다.

ㄷ. 베블런은 상위 계급뿐 아니라 하위 계급도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한다고 보았다. 그림의 강연자도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ㄹ. 베블런은 하위 계급의 가장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마저도 관습적인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는 방편은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 (중략) ... 사회의 어떤 계층도, 심지어 가장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마저도 관습적인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 타인보다 앞서려는 경쟁 속에서 자신의 과시적 소비적인 체면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과시적 소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 베블런, 2023학년도 EBS 수능완성 95p 4번 문항 -

6. 도가 사상과 불교 사상의 죽음관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삶과 죽음, 끊어질 수 있는 순환인가?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가)는 도가 사상, (나)는 불교 사상이다. 정확히 말하면 (가)는 도가 사상이 장자의 입장이다. 그런데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 ‘죽음관’에 대해서는 도가 사상의 입장을 출제할 때 거의 장자의 입장을 가져온다.

[선지 분석] ① 도가 사상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기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아니라 기의 모임과 흩어짐의 과정이다. 제시문에서도 “삶은 기의 모임[습]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산]일 뿐이다.”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도가 사상에서는 도에 일치하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③ 불교 사상에서는 삶에서 겪는 늡음과 고통은 죽음을 통해 영원히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통해 지속된다고 본다. 이것이 불교 사상에서 말하는 윤회(輪廻)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불교 사상에서 지향하는 바는 고통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④ 불교 사상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이므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④ 삶과 죽음을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生死一如]로 여겨야 한다. (불교 사상 O)

-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6번 문항 -

⑤ 불교 사상에서 부정할 진술이다. 불교 사상과 도가 사상 모두 삶과 죽음을 자연적 현상으로, 순환의 과정으로 여긴다. 그러나 불교 사상에서 그러한 순환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불교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의 상호 의존 관계를 깨달아 해탈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순환을 끊을 수 있다.

7. 과학 기술자의 책임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기초적 독해 능력만 있으면 된다.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같은 과학자가 오직 내적 책임만을 지면 된다고 보는 데 반해, 을은 과학자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본다.

[선지 분석] ① 갑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갑은 과학자에게 연구 과정 중 날조나 표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을은 과학 기술자가 연구 결과로써 인류의 이익을 증진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과학자가 오직 내적 책임만을 진다고 보는 데 반해, 을은 과학자가 외적 책임까지 진다고 본다.

④ 을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을은 과학자가 갖는 내적 책임을 인정한다.

⑤ 을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을은 과학자가 갖는 내적 책임을 인정한다.

8. 롤스와 싱어의 해외 원조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롤스의 해외 원조 이론에 대해, 기출문제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개념에서 좀더 나아간 개념을 묻고 있다.

[정답] ②

[제시문 분석]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선지 분석] ㄱ. 롤스는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 중 무법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적 제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무법 국가와 고통받는 사회는 모두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로서, **롤스는 이 두 사회 모두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강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무법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적 제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이다.

자유정체와 적정수준의 위계정체 모두가 존중하는 인권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보편적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인권의 항목은 만민법에 본질적이며, 그것들이 특정 지역에서 지지되건 아니건 간에 정치적(도덕적) 영향력을 지닌다. 이 인권들의 정치적(도덕적) 힘은 모든 사회들에 확대되며, 이것들은 무법국가를 포함한 모든 만민과 사회들에 구속력을 발휘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무법국가는 비난받아야 하며, 중대한 경우에는 강제적 제재와 심지어 내정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

- 롤스, 「만민법」 -

무법국가까지도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하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민법에 따라 만약 무법국가가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강제적 제재와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 김일수, 「롤스의 해외 원조 의무 논증에 대한 고찰」 -

ㄴ. 롤스에 따르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해서 모두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인 것은 아니다. **롤스는 ‘자애적 절대주의 체계’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임에도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니라고 보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애적 절대주의benevolent absolutism 사회다. 이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지만, 그 성원이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부되기 때문에 질서정연하다고 할 수 없다.

- 롤스, 「만민법」 -

그렇다면 여기서 롤스가 제시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롤스에 따르면 어떤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구성원에게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롤스의 입장에서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님에도 원조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ㄷ. 싱어는 한 개인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빈민을 원조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본다. 싱어에 따르면 원조 의무는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할 것을 원조 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만일 원조 이행이 원조 주체에게 과도한 희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조를 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싱어가 모든 상황에서 비용과 효용을 고려하여 행동할 것을 강조하는 공리주의 사상가임을 알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무조건적 의무’는 공리주의 사상과 양립하기 어렵다.

ㄷ. 을: 원조의 의무는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할 것을 원조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싱어 X)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번 문항 -

ㄴ. 을: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싱어 O)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항 -

ㄹ. 싱어는 공리주의 원칙이 원조 의무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라고 본다. 롤스는 만민법이 원조 의무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라고 보았다.

9. 통일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가)는 흡수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 (나)는 흡수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선지 분석] X: (나)는 (가)와 달리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체제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나)는 (가)에 비해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다. Y: (나)는 현재의 북한 체제가 갖춘 어떤 요소도 미래의 통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의 북한 체제에서도 미래의 통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가)의 주장과 상반된다. 그러므로 (나)는 (가)에 비해 ‘북한 체제를 우호적인 태도로 대하는 정도’는 낮다. Z: Y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가)에 비해 ‘북한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정도’는 높다.

10. 테일러, 칸트, 싱어의 환경 윤리 이론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ㄷ 선지를 통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문항의 ㄷ 선지를 오마주해 보았다.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깊은 생명 중심주의 사상이 테일러, 얀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칸트, 병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이 싱어이다.

[선지 분석] ㄱ. 테일러가 부정할 진술이다. 테일러는 인간이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해쳐도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의 부차적 이해관계가 문명 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라면, 그것을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생존)에 우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테일러는 인간의 활동이 살아 있는 생명체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절차적 규칙을 우선성의 원리 형식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자기 방어의 원리, 비례(균형)의 원리, 최소악의 원리, 분배적 정의의 원리, 그리고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이다. 자기 방어의 원리란 도덕적 행위자에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협하거나 위협적인 유기체들에 대해 도덕적 행위자가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비례(균형)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명품 소비를 위한 동물 가죽)와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생존)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한다는 원리이다. 최소악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 이해관계이지만 문명 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해 온 것들과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불가피하게 동식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원리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란 최소악의 원리와 분배 정의의 원리가 적용될 때 비인간인 유기체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리이다.

- 2019학년도 EBS 수능완성 59p 자료와 친해지기 -

ㄴ.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로서, 인간이 이성적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라는 이유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반면 싱어나 테일러는 인간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그 근거를 인간이 이성적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라는 데서 찾지 않는다.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은 생명체이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된다. 싱어에 따르면 인간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된다.

ㄷ. 테일러와 싱어뿐 아니라 칸트도 동의할 진술이다. 먼저 테일러는 인간에 대한 의무의 도덕적 근거가 인간이 생명체라는 데 있다고 보았다. 테일러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싱어는 인간에 대한 의무의 도덕적 근거가 인간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다는 데 있다고 본다. 싱어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에 관련한 간접적 의무를 지니므로 동물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되며, 동물에 관련한 간접적 의무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칸트는 인간이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의무 때문이라고 보았다.

ㄷ. D: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칸트 X)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문항 -

ㄷ.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인간은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지 않을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11. 칸트의 성 윤리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보수주의에 가깝지만 출산을 요구하지 않는 사상이, 칸트.

[정답] ④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칸트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는 부부 관계에서는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출산을 의도할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칸트 X)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

ㄴ. 칸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성적 관계도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성적 관계를 맺으면 그건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의문을 갖지 말아야 한다. 다음의 기출문제 선지를 살펴보자.

③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칸트 X)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

위 기출문제 선지를 통해 칸트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성적 관계 중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관계 중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성적 관계도 있음을 암시한다.

ㄷ. 칸트에 따르면 성애(性愛)의 목적은 종족의 보존이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인격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듯이, 성애(性愛)도 종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양자 각각은 자연목적이다. ... (중략) ... 법 이론에서 증명된 바는, 인간은 두 인격이 교호(交互)적으로 상호 책무를 지는 법적인 계약에 의한 특별한 제한 없이는, 이러한 쾌락을 즐기 위하여 다른 인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과연 이러한 향락과 관련하여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의 (한낱 실추가 아니라) 모독이 되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저러한 향락에 대한 충동을 육체적 쾌락이라고 (단적으로 환락인 것이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쾌락은 부정(不貞)이라 일컫고,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인 충동과 관련된 덕은 정숙(貞淑)이라고 부르며, 무릇 이 정숙은 응당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표상된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

ㄷ. 칸트는 두 인격이 교호적으로 상호 책무를 지닌 법적인 계약에 의한 특별한 제한이 있다면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인격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ㄷ 선지 해설의 인용 자료 참고). 다시 말해, 칸트에 따르면 결혼을 한 관계에서는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한 성적 관계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 노직, 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이 시민 간 ‘권력’의 불평등까지 허용한다는 내용,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러나 롤스가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 무슨 중세에 존재 하던 신분제와 비슷한 무언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 두자.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선지 분석] ① 노직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최소 국가 체제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노직은 무정부주의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국가의 정당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역서는 Robert Nozick의 *Anarchy, State and Utopia*를 번역한 것이다. 본서의 저자는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정교수로 있다. 본서는 1974년 출간된 것으로 무정부주의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의 정당화 가능성, 국가의 기능, 이상국의 이념 등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를 한 책이다.

- 남경희,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역자의 말 -

② 해설이 좀 상세하고, 논리적 흐름을 잘 따라가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지들의 해설과는 달리 문단 나눔을 넣었다.

롤스는 어떤 사회의 분배 상태가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어떤 사회의 분배 상태가 공정한지 여부는 원초적 상황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정의의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에 관련된 것이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 정의관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가 갖는 분배적 측면(distributive aspects)을 평가할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사회의 기본 구조나 사회 체제 일반이 갖는 다른 덕목들을 규정하는 원칙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 롤스, 『정의론』 -

‘롤스는 무슨 무슨 기준이 없다고 보았다고 배웠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다음의 설명을 잘 읽어 보아야 한다(여기서부터는 ② 선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읽어 보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지를 결정해 줄, 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의로운 분배 결과를 도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롤스에 따르면 분배 결과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롤스가 말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롤스는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원칙에 대한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합의 절차에 따라 나온 원칙은 반드시 공정한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순수 절차적 정의).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합의의 절차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현실에서는 그러한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정한 합의의 절차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롤스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미 각 사람의 재능, 집안 배경 등 우연적 요소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을 모두 불러모아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원칙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남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에게 유리한 분배 원칙을 고집하려 하는 데 반해 ‘여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여자에게 유리한 분배 원칙을 고집하려 할 것이다. 또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분배 원칙을,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분배 원칙을 고집하려 할 것이다. 현실에서 이런 합의를 시도한다면 모두

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합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것이다. **롤스는 모두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합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현실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우연적 여건을 배제한 가상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롤스가 가정하는 가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에 의해 모든 우연적 여건이 배제되며, 모든 합의 당사자는 자신의 성별, 능력, 사회적 위치, 심지어 심리적 성향까지도 알 수 없게 된다.**

갑: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며,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가상의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하게 될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 롤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85p 3~4번 문항 -

그 결과 원초적 입장에서는 합의 당사자들이 선불리 남성 혹은 여성, 공부를 잘하는 사람, 청소를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분배 원칙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

을: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손해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 롤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 문항 -

이렇게 모든 우연적 여건을 배제한 가상 상황인 원초적 입장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합의의 절차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이다.

을: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능, 가치관, 심리적 경향 등을 알지 못하는 가상 상황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보편적이고 정당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롤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3번 문항 -

그러므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은 반드시 공정하다.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 즉 모든 우연적 여건이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서 비로소 공정한 합의가 가능해진다는 롤스의 설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parties)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각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게 되는 원초적 입장의 여건들이 주어질 경우,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즉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존재로서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최초의 상황이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 롤스, 『정의론』 -

이제 어떤 분배 상태가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반드시 공정할 수밖에 없는 정의의 원칙이 그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의 원칙의 도출 과정이 “분배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없고, 분배 결과의 공정성은 공정한 합의의 절차에 의존한다.”라는 원리에 따른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롤스에 따르면 분배 상태의 공정성을 판단할 절차에 독립적인 기준은 없으나, 분배 상태의 공정성을 판단할 기준(= 정의의 원칙)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롤스는 무슨무슨 기준이 없다고 보았다!’라는 식의 단순 암기로 접근해서는 고난도 킬러 문제에 대비할 수 없다. 각 사상가의 논변의 내용과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해야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고득점을 맞출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다가올 수능에서 시험지를 죽여 버리기(Killing Paper)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해야 한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부(富)가 각 사람이 지닌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병: 분배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우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 -

르. D: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어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O)
-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 -

병: 정의는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의 옳음은 일종의 비례인데, 그것은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문항 -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두 사람이 지닌 가치가 동등하다면 그 두 사람에게 분배되는 부도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두 사람이 지닌 가치가 동등함에도 그들에게 동등하지 않은 몫을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분배 정의란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어떤 의미일까?

그. A: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O)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항 -

르. D: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O)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문항 -

이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동등한 몫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포인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재화의 동등함’이 아니라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갑: 분배적 정의는 가령 사람 a와 b가 각각 물건 c와 d를 얻기 전과 후의 비율이 동등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하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번 문항 -

사람 a와 b가 있을 때, 만일 두 사람의 가치가 동등하다면 a와 b에게 분배되는 몫도 동등해야 한다. 그래야 분배 이전과 분배 이후에 두 사람 간 비율이 동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a = b$ 일 때, $a : b = a + x : b + x$). 그러나 사람 a와 b가 동등한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둘에게 동등하지 않은 몫을 분배하거나($a = b$ 일 때, $a : b \neq a + y : b + z$), 반대로 사람 a와 b가 동등하지 않은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둘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한다면($a \neq b$ 일 때, $a : b \neq a + x : b + x$) 분배 이전과 이후의 두 사람 간 비율이 동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의 기호를 ‘수학적 덧셈’의 의미를 지

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계산이 이상해진다. 그냥 ‘a + x’는 ‘a 라는 사람에게 x라는 재화를 분배한 것’의 의미로만 이해하면 된다.

④ 노직만의 입장이다. 노직은 취득과 이전 절차의 공정성만으로도 분배 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반면 롤스는 취득과 이전 절차의 공정성만으로는 분배 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은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롤스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가 공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러한 분배 상태는 공정하지 않다.

② 옳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롤스 X)
-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5번 문항 -

⑤ 롤스는 정의의 제2원칙에 의해 권력의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와는 달리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리라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것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

여기서 롤스가 ‘권력’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의 일종으로 보지 않았음을 이해해야 한다.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의 불평등은 허용될 수 없지만, 권력의 불평등은 재산의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조건 아래 정의의 제2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권력, 부 등의 사회적 가치가 각 사람이 지닌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각 사람이 지니는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도 허용될 수 있다.

13.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짓을 설파하고 흑세무민(惑世誣民), 지록위마(指鹿爲馬)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세상에는 못된 어른들, 예를 들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기본적 논리 규칙에까지 위배되는 주장이 마치 타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정답] ⑤

[제시문 분석] 칼럼에서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여 거짓 정보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보 수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지 분석] ① 칼럼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칼럼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칼럼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칼럼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칼럼의 제목으로 적절하다.

14. 동물 개체 복제에 대한 찬반 입장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발문에 따르면 핵심적 쟁점이 아니라 부수적 쟁점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과 을은 인간 배아 복제와 인간 개체 복제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동물 개체 복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갑은 동물 개체 복제가 동물 종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동물 개체 복제에 찬성하지만, 을은 동물 개체 복제의 허용이 동물 종의 다양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인간 개체 복제의 허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물 개체 복제에 반대한다.

[선지 분석] ① 갑과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갑과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갑과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갑은 동물 복제가 멸종 동물을 복원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존함으로써 동물 종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동물 복제가 인위적으로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동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동물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⑤ 갑과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5. 칸트와 벤담의 형벌 이론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칸트는 벤담과 달리 자신의 형벌 이론을 사회 계약론의 토대 위에 둔다. 그러나 칸트가 형벌 이론의 토대로 삼는 사회 계약론은 베카리아나 루소의 것과는 사뭇 다른데, 이 차이 지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벤담은 사회 계약론이나 자연법 사상 등을 비판하였다.

[선지 분석] ㄱ. 칸트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형벌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에 범죄자로서의 인격은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형벌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인격은 예지체 인격이며, 예지체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현상체 인격으로서의 인간이다.

병: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 칸트,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

누구도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무릇 누군가에게 그가 의욕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형벌이 아니며, 형벌받기를 의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 - '만약 내가 누군가를 상해한다면, 나는 형벌받기를 의욕한다.'고 말함은 '나는 여타의 모든 이들과 함께 국민 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형법들이 될 법칙[법률]들에 복종한다.'는 것이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형법들을 구술[명]하는 공동입법자로서 나는 신민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다. 무릇 그러한 자로서, 곧 범죄자로서 내가 입법에서 표를 가질 수는 없다. (입법자는 신성하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로서의 나에 대해 하나의 형법들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순수한 법적으로-입법[법칙수립]하는 이성(예지체 인격)이며, 이 이성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로서, 따라서 하나의 다른 인격(현상체 인격)으로서의 나를 시면연합체 중의 여타의 모든 이와 함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국민(즉 국민 중의 각 개인)이 아니라, 법정(즉 공적 정의)이, 그러니까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구술[명]하는 것이며, 사회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무릇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 있어야 한다면, 이 자에게 형벌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도 위임되지 않을 수 없을 터이겠고,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 - 이러한 케번의 착오의 주요점(제1의 오류)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 자신의 판단을 - 이것은 사람들이 그의 이성을 필연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 일인데 -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앗는 의지의 결정으로 보고, 동일한 인격 안에 법의 수행과 법의 판정이 합일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하는 데에 있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

ㄴ. 칸트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정언 명령으로 주어진다고 보았다.

갑: 법법자에 대한 처벌은 정언명령으로 주어진다. 사법적 형벌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든 시민사회를 위해서든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

- 칸트,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

이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언 명령'이란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형식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 정언 명령: '너는 무조건 ~을 해야 한다.'는 형식의 명령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22p -

반면 벤담은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벤담에 따르면 형벌이 근거가 없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또 형벌이 없이도 해악이 방지될 수 있어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형벌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벤담이 공리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자신의 형벌 이론을 전개한다는 점을 알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3.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벌이 가해져서는 안 됨이 명백하다.
- (1) 형벌이 근거가 없는(groundless) 경우. 그것이 해악을 방지하도록 작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 (2) 형벌이 효력이 없는(inefficacious) 경우. 그것이 해악을 방지하도록 작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 (3) 형벌이 유익하지 않거나(unprofitable)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expensive) 경우. 그것이 산출할 해악이 방지할 해악보다 더 큰 경우이다.
 - (4) 형벌이 불필요한(needless) 경우. 그것이 없이도, 즉 더 싼 값으로 해악이 방지될 수 있거나 저절로 멈춰질 수 있는 경우이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

ㄷ. 칸트는 형벌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복의 수단이라고 보았다. 칸트의 입장에서 형벌이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복의 수단은 맞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본적 개념이다.

ㄴ. B: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칸트 O)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번 문항 -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칸트 O)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

ㄷ. 벤담은 형벌이 범죄자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관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① 벤담의 입장이다. 벤담은 형벌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면서도, 범죄자에게 지나친 고통을 부과하지 않도록 관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후략).
- 2022학년도 EBS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6p 4번 문항 해설 -

벤담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초래하므로 그 자체로는 악(惡)이지만 그것이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는 경우에는(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필요악으로서 허용된다. 그러므로 **벤담의 입장에서 볼 때 형벌이 범죄자에게 미치는 고통의 양은 작을수록,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는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벤담은 만일 두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가 같다면(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강도가 비교적 낮은 형벌을 더 선호할 것이다.

16. 플라톤의 예술관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플라톤의 도덕주의 예술관에는 그의 이데아론이 반영되어 있다. 플라톤의 도덕주의 예술관 자체는 도덕주의의 기본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이때 그의 이데아론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답] ②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도덕주의 사상이 플라톤의 입장이다.

[선지 분석] ①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가의 예술적 자율성은 적절히 제한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예술적 자율성은 제한받아야 한다.

... (전략). 그러하니 작품 속에 무절제와 야비함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예술가를 추방해야 하네.
- 플라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

ㄷ. 진리 인식을 위해 예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플라톤 X)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143p 2번 문항 -

② 플라톤은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존재 이유가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데 있다고 보고,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도덕 기준에 따라 선별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영혼의 조화와 질서를 깨닫고, 청소년은 건전한 품성과 사교를 기를 수 있다고 봄
-----	--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138p -

③ 플라톤은 예술가가 미적 가치를 도덕적 가치보다 우선하여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도덕주의 사상이인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가는 도덕적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④ 플라톤은 미(美)의 이데아, 즉 아름다움의 원형이 예술가의 창작 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는 아름다움의 원형이 존재할 수 없고, (플라톤 X)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번 문항 -

플라톤의 입장에서 예술가에게 아름다움의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라는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예술가가 이데아 자체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예술가는 사물을 모방할 수 있을 뿐 이데아 자체를 만들 수는 없네. 그래도 예술가의 훌륭한 작품은 영혼의 교육에 도움을 주네. 이때 음악적 수련이 가장 가치가 가치가 있네. ... (후략).
- 플라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

⑤ 플라톤은 예술가가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는 작품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플라톤 O)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 -

17. 롤스와 싱어의 시민 불복종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헌법이 거의 정의롭다는 말은 곧 사회 체제가 거의 정의롭다는 말이다. 헌법은 체제를 규정하는 최고의 법 규범이기 때문이다.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이 헌법의 정당성에,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개념이 평가원 기출문제에 두 번 출제된 바 있다.

④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롤스 X)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항 -

③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롤스 X)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 불복종이 헌법의 근거나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아닌 이유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있는 사회에서 헌법의 근거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므로, 헌법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롤스 O)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번 문항 -

시민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 롤스, 『정의론』 -

만일 헌법이 매우 부정의한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므로 롤스가 볼 때 그러한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

나. 갑: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롤스 O)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번 문항 -

②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최종적으로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아니라 전체 유권자, 즉 시민들에 의해 판단된다.

그런데 민주 사회에 있어서 각 시민에게는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그 원칙들에 의거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가 언제나 도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나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해석이 있을 수가 없으며, 그것은 최고 법정이나 입법부에 의해서조차도 주어질 수 없다. 사실상 재판 기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사법 기관은 헌법에 대한 각자의 해석과 그것을 알려주는 정치적 이상을 내세운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정이 최후의 발언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헌법에 대한 해석에 수정을 강요할지도 모르는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정은 자신의 교섭을 이유와 논거를 들어서 제시할 것이나 그것이 헌법에 대해서 시민 대다수를 설득시켜야 한다. 최후의 법정은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유권자이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한 집단에 호소하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

이는 애당초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서 시민 불복종이 무엇

에 근거한 행위인지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한 정치적 저항 행위이다. 이 ‘공유된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누구에게 공유되었다는 말일까?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였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으로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후략).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141p 개념 플러스 -

롤스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존재한다고 말한 그 ‘공유된 정의관’이 입법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된 정의관이라면, 당연히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역시 전체 시민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이다(④ 선지 해설의 인용 자료 참고).

④ 싱어가 제시하는 시민 불복종의 두 가지 경우 중 첫째는 다수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법률, 정부 정책 등에 대해 불복종하는 것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간접 민주주의(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진정한 의사가 법률,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대표자들이 다수의 선거구민과 같은 견해를 가질 것임을 보장할 방법은 없다. 텔레비전에서 게나렐리의 비디오테이프*에서 발췌한 부분을 본 미국인들 다수는 그 실험을 지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다. 대표자들을 선택할 때, 혹은 정당을 선택할 때, 선거인들은 제시되어 있는 저 ‘꾸러미’의 정책이 아니라 이 꾸러미의 정책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정책에 찬성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자들은 그들이 열망하지 않는 다른 정책에도 찬성해야만 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다. 투표자가 좋아하는 정책이 어떠한 주요 정당에 의해서도 제안되지 않는 일도 또한 생기게 된다.

- 싱어, 『실천윤리학』 -
* 끔찍한 동물 실험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인용자 주]

이는 우리 사회가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한 결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유권자들은 개별 정책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 꾸러미를 들고 나온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때때로 다수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정책이 시행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시민 불복종을 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라 부합하는 것이 된다. 싱어는 이러한 경우의 시민 불복종은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확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시민 불복종이 위법 행위, 불법 행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시민 불복종 이전에는 합법적인 수단이 먼저 선행되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부정의를 교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확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첫 번째 방식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 (중략) ... '시 민불복종'이라는 이름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은 첫 번째 근거에 의한 불복종이다. 이러한 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확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혁을 보장할 정상적인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확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그들의 재선출 캠페인에 많은 돈을 기부할 특별한 이익집단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 (중략) ... 이 모든 경우에, 현대의 시민불복종의 표준적인 형태들, 즉 수동적 저항, 행진 혹은 연좌는 적합하다. ... (중략) ...

이러한 상황에서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혹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원들에게 설득하려는 것이거나, ... (중략) ...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다수를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보통 [법률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한)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

- 싱어, 『실천윤리학』 -

솔직히 ③ 선지는 『실천윤리학』 원전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조금은 투박한 면이 없잖아 있다. 평가원 시험에서 이 개념이 출제된다고 해도 아마 이런 표현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위법 행위의 자체가 '합법적 수단의 사용'으로부터 시작하여 확장된 것'은 맞지만, '합법적 수단의 사용'이 확장되어 여전히 합법적 수단의 사용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관련한 아이디어(싱어가 어떤 취지로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지)만 챙겨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⑤ 롤스만의 입장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반드시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반드시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유된 정의관 자체를 수정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도 행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에게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불복종이 공동체에 대한 호소라면 왜 공동체가 이미 수용하고 있는 원칙들을 근거로 하는 호소여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현존하는 사회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고 보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이상일 뿐이므로 공유된 정의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상이나 시민 불복종이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이 완전한 정의관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파한다고 본다.

- 싱어,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98p 6번 문항 -

* 롤스를 가리킨다. [인용자 주]

제시문의 '나'는 싱어이며, '어떤 사상가'는 롤스이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한 사회 내에 공유된 정의관이 정의롭지 못하면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종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롤스는 공유된 정의관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법률과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공유된 정의관 자체는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후략).

-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9p 6번 문항 해설 -

싱어의 입장에서 공유된 정의관 자체를 바꾸기 위해 시도되는 시민 불복종은 ③ 선지 해설에서 언급한 시민 불복종과 다른 경우의 시민 불복종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먼저 ③ 선지 해설의 인용 자료에서 중략된 부분 중, (중략)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

... (전략), 두 번째 방식은 그러한 결정이 다수의 견해의 진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심각하게 그릇된 일이어서 다수에 반대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 싱어, 『실천윤리학』 -

아까 싱어가 제시한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견해에 진정으로 부합하지 않는 법률, 정부 정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싱어가 제시하고 있는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견해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법률, 정부 정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두 시민 불복종의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정당화 논리도 달라야 할 것이다. 싱어는 첫 번째 경우의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선지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을 복원하려는 시도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다수의 진정한 견해에 부합하는 법률, 정부 정책 등에 저항하는 두 번째 경우의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중심적 원칙인 다수결의 규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의 시민 불복종은 대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싱어가 선택하는 전략은 다수결의 규칙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규칙에 대한 옹호론이 과대평가되지는 말아야 한다. 지각 있는 민주주의자라면 어떤 사람도, 다수가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49%의 사람들이 틀릴 수 있다면, 51%의 사람들도 틀릴 수 있다. 다수가 동물해방전선이나 구조작전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항의자들의 견해를 지지하느냐 여부가, 이러한 견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여부를 확정하지는 못한다. ... (중략) ... 그들 편을 드는 다수가 없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적 전통에 전적으로 대항하는 자가 되며, 바로 그들이 억압자, 즉 다수에게 다수의 의사와 반대되는 어떤 것을 받아들여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얼마만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 싱어, 『실천윤리학』 -

그러므로 싱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중심적 원칙이자 의사 결정에 있어 대체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다수결의 규칙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싱어는 만일 다수의 결정이 “너무도 소름끼치는” 일이라면 다수에 대한 강압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다수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결정이 너무도 소름끼치는 일이어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다수에의 강압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진정한 다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종할 책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수에 대해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그것에 불복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싱어, 『실천윤리학』 -

우리는 나치식의 대량학살정책이 다수결적인 투표에 의해서 승인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자신이 그러한 다수결의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수결의 규칙을 너무 극단적으로 존중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엄청난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것 같은 어떠한 수단을 실제로 사용한다고 해도 정당화된다.

- 싱어, 『실천윤리학』 -

두 가지 추가 설명을 덧붙이고 싶다(여기서부터는 ⑤ 선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읽어 보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첫째는 주목할 만한 표현에 관련한 것이다. ③ **선지 해설의 인용 자료에서, 싱어에 따르면 다수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시민 불복종은 설명 그것이 위법 행위라 할지라도 '다수를 강제하는 것이' 이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다수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에게 다수의 의사와 반대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역할자'이다.** “시민 불복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수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수반할 수 없다.”라는 식의 선지가 나오면 싱어의 입장에서 X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선지로 내고 싶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자리가 도저히 안 나서 포기했다. 혹시 6월 모의평가에 이 개념이 출제된다면, 꼭 이 설명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두 번째는 싱어가 다수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첫 번째 경우의 시민 불복종과 다수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두 번째 경우의 시민 불복종 중, 어떤 시민 불복종이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관련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싱어는 첫 번째 경우의 시민 불복종이 더 정당화되기 쉽다고 본다.** ③ 선지 해설의 인용 자료에서 싱어가 “‘시민불복종’이라는 이름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은 첫 번째 근거에 의한 시민불복종이다.”라고 말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싱어는 다수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첫 번째 경우의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두 번째 경우의 시민 불복종보다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 첫 번째 경우의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데는 다수결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두 번째 경우의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거슬러도 될 만큼 극단적인 부정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민불복종은 자주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화는 민주주의적인 결정에 복종할 책무를 무시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 (중략) ...

명백히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도 훨씬 어렵다.

- 싱어, 『실천윤리학』 -

*다수의 견해에 부합하는 시민 불복종의 특징들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인용자 주]

18. 맹자의 직업 윤리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정신노동도 '노동'의 일종이다. 이런 말장난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유교 사상이 맹자의 입장이다.

[선지 분석] ① 맹자는 유교 사상가로서, 기본적으로 공자가 제시한 정명(正名)의 정신을 받아들였다. 정명이란 사회적 분업을 인정하면서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맹자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통치자와 백성의 본성이 모두 선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맹자는 통치자의 역할과 백성의 역할을 구분하였는데(⑤ 선지 해설의 인용 자료 참고), 맹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정신노동에, 일반 백성은 육체노동에 종사해야 한다.

③ 맹자는 통치자가 백성이 본래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덕으로써 인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치자는 백성이 선한 본성을 확충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주장이다.

④ 맹자는 통치자가 측은해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惻隱之心)에 기반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맹자는 일반 백성의 경우 일정한 생업, 즉 향산이 없으면 일정한 도덕적 마음, 즉 향심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맹자에 따르면 그러므로 통치자는 백성이 일정한 생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반면 선비는 일반 백성과는 다르게 향산이 없이도 향심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선비라고 할 만하려면, 그는 향산이 없이도 향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백성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 데 반해, 선비는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두 향산 없이는 향심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선비는 향산이 없이도 향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에는 귀천(貴賤)이 있고 소대(小大)가 있으니, 작은 것을 갖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갖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小人)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大人)이 된다. 대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정신노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노동을 하는데,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으며, 통치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하고 통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양받는 것이 천하의 원칙이다.

- 맹자,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94p 1번 문항 -

19. 로크, 홉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이 문항은 주로 윤리와 사상 기출문제에 등장하였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의 윤리와 사상 기출문제는 모두 학습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교육과정의 변화로 이제는 출제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기출문제나, 평가원의 입장 변화로 오개념을 담고 있는 기출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많이 풀어 보는 것이 좋다. 3개년만 풀어 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수험생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쉽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능하면 2014학년도 것부터(더 이전 것부터 보아도 좋다), 정 시간이 없어도 2017학년도 것부터는 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최근 3개년만 풀어도 충분하다는 잘못된 조건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참 안타까울 노릇이다.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로크, 을은 홉스,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선지 분석] ① 로크는 사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인 인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반면 홉스는 국가의 주권을 사회 계약 체결의 당사자들이 아니라 군주가 가진다고 보았다. ‘홉스의 입장에서 볼 때 군주도 사회 계약의 주체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풀는 수험생이 있다면, ⑤ 선지의 해설을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홉스에 따르면 군주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① A: 사회 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홉스 O, 로크 X)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14번 문항 -

② 로크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홉스뿐 아니라 로크도 사회 계약 체결이 전쟁 상태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로크한테 웬 전쟁 상태? 로크는 자연 상태가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는 사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아래의 해설을 꼼꼼히 읽고 이해함으로써 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일단, 로크가 자연 상태에도 ‘분쟁’이 존재한다고 보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우나,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법률이나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자연권을 온전히 향유하기 어렵다. 공통의 법률,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개인 간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로크와 홉스의 공통점이다.

갑: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동된 법률이 없고, 무사 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 로크,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번 문항 -

그. 갑: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는 재판관이 된다. (로크 O)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번 문항 -

그렇다면 로크가 말하는 ‘전쟁 상태’란 대체 무엇일까? 다음의 기출문제 제시문을 한번 살펴보자.

을: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는 다르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성애 따라 평화와 상호 보호의 상태로 살아가지만, 전쟁 상태에서는 폭력과 상호 파괴의 상태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를 피하기 위해 사회를 결성하게 된다.
- 로크,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5번 문항 -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전쟁 상태를 피하기 위해 사회를 결성한다는 로크의 설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전쟁상태(하늘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다름이 있는 자들간에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분쟁이라 할지라도 결국 도달하기 마련인 상태)를 피하려는 것이 사람들이 사회를 결성하고 자연상태를 떠나는 커다란 이유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호소를 통해 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 권위, 곧 지상의 권력자가 있는 곳에서는 전쟁상태의 지속이 배제되고 분쟁이 그 권력에 의해 해결되기 때문이다.
- 로크, 『통치론』 -

로크는 전쟁 상태를 ‘다름이 있는 자들 간에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분쟁이라 할지라도 결국 도달하기 마련인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름이 있는 자들 간에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없는 곳’은 로크가 상정하는 자연 상태이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공통의 법률과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부재한 상황을 지속하면 그것이 결국 전쟁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자연 상태가 이러한 전쟁 상태로 치닫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③ 홉스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된 원인, 곧 경쟁과 불신, 공명심이 있다고 보았는데, 홉스에 따르면 전쟁 상태는 이 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국가 형성은 이러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경쟁(competition)이며, 두 번째는 불신(diffidence)이고, 세 번째는 공명심(glory)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

갑: 국가는 경쟁, 불신, 공명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국가는 계약자인 개인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그들을 구속하는 최상의 힘을 가진다.
- 홉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9번 문항 -

④ 홉스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홉스는 주권자가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① 갑: 국가는 주권자와 시민들 간의 계약 체결로 인해 설립된다. (홉스 X)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20번 문항 -

주권자가 된 자가 미리 그의 국민들과 어떤 신약도 맺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만일 그런 신약이 존재한다면 그가 다수 전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여 신약을 맺었거나, 아니면 각자와 개별적으로 신약을 맺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다수 전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일 그가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과 개별적인 신약을 맺었다면 그런 신약은 그가 주권을 얻은 뒤에는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군가가 주권자의 온갖 행위를 신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주권자의 행위는 주권자 자신의 행위이자 동시에 그들 각자의 개별적 인격과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개념은,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가 사회 계약 체결의 결과로 탄생한다

는 개념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병: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 홉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행복한 삶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인데, 개인은 국가 안에서만 이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제자: 스승님, 만물에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스승: 그건 바로 행복이라네. 덕(德)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지.
제자: 그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갖추어야 한다네.
- 아리스토텔레스,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번 문항-

② 국가 안에서만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 O)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2번 문항-

20. 현실주의와 칸트의 국제 평화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칸트가 국가를 상속, 교환, 매매, 증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 '이유'를 아는가? 단순히 주장을 외우는 데서 더 나아가 특정 사상이 그 주장을 펴는 이유와 배경까지 공부해야 한다.

[정답] ②

[제시문 분석] 같은 현실주의 사상가 모겐소, 옴은 칸트이다.

[선지 분석] ㄱ.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상승시킨다는 의미이다.

갑: 본래 이기적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 국제 정치의 본질이다. 힘을 통해 힘을 견제하는 세력 균형이 전쟁을 억제한다.
- 모겐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번 문항-

(가) 국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국가들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현실주의,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가)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의 대외 정책의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국익 추구로 인하여 국제 분쟁이 발생하며,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또는 억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 현실주의,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나. 칸트에 따르면 국제 연맹의 필요성은 침략 전쟁으로부터의 방어에 있다.

③ 칸트에 따르면 국제 연맹은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한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55p 7번 문항 해설-

ㄷ. 칸트에 따르면 국가도 하나의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④ 국가는 도덕적 인격이므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자유의 상태에 있다. (칸트 O)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183p 7번 문항-

칸트가 국가를 상속, 교환, 매매,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 역시 국가가 하나의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을: 도덕의 주체인 인간은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할 수 없으며, 국가도 한 인격체로서 타국의 한낱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독립 국가도 상속, 매매, 증여, 교환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영구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 칸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번 문항-

ㄹ. 현실주의에서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폐지하지 않아도 주권을 지닌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칸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을 지닌 공화 정체 국가들이 평화 연맹을 결성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갑: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칸트 O)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출제 및 해설]

유삼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해움 수능윤리 연구소 카케오텍: ysh04129 / 김과와: 유삼환

[검토]

강수영 연세대학교 철학과, 해움 수능윤리 연구소 인스타그램: @unkicetic

구은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해움 수능윤리 연구소 메가스터디 큐브: 구은빈 마스터 / 김과와: 구은봉

김관우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연구소 인스타그램: @kingwanu.3d

김민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연구소

김수현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오준희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이동욱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연구소 인스타그램: @buryourpride

이지인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연구소 메가스터디 큐브: 이지인 마스터

에티카

* 확인 사항

- 해설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했는지 꼼꼼히 확인 하시오.